

EPR제도 도입에 따른 수집업계 입장

A wastes resources industry a situation of enforcement EPR system

조광훈 / 한국폐자원재활용수집협의회 사무총장

1. 효율적인 EPR제도의 선행과제

EPR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첫째,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깨끗한 환경보전과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알고 국가경제의 밑바탕인 자원의 낭비를 막는 첨병으로서의 의무인 자원을 절약하는 습관과 실행이 관건이다. 각종 법 규제 등에 의한 제재나 댓가보상을 바라는 재활용이 아닌 이 나라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무를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

둘째, 제품의 생산자(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대기업)의 의식구조일 것이다.

물론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고취시키거나 느낌으로 와닿게 하는 포장재(용기 등)등의 곁포장이 중요할 것이지만, 반대로 소비자의 약한 마음을 어지럽히는 생산자의 자세는 한번쯤 짚고 넘어 가야 할 것이다.

계속해서 유행을 타는 상품포장, 1년에도 몇 번씩 바뀌는 모델들, 과연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짚고 넘어가야 할 시기라 생각한다.

생산자의 제품 포장이 아닌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자세가 바로 잡히고 적극적인 재활용 촉진을 위한 경영자의 인식이 전환되면 재활용에 대한 생산자의 역할은 크게 우려할 것이 못되리라 사료된다.

셋째, 정부의 재활용 정책에 대한 올바른 집행일 것이다. 민간전문 단체나 조함을 받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지의 실현일 것이다.

잘될 때는 시장경제에 맡기고 안되면 정부에서 통제하겠다는 미적지근한 마인드가 아닌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선진국의 예를 보나 현실적으로나 정부의 쫓아가는 집행이 아닌 앞서서 유도하여 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일례로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설립과정에서부터 민간수집상과의 마찰 등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았는가. 바로 정부에서 해주어야 하는 것은 국민의 의식구조 전환에 치중하여

야 할 것이다. 좀 전에 언급한 한국자원재생공사의 기능 중 대국민 홍보관 등의 운영은 무척 바람직하고 이러한 것을 국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EPR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민간재활용산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이고 특히 산업화(기술, 시설, 장비 등)를 위해 영세업종에 대한 집하장조성 지원 등의 정책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의 확립일 것이다. 이는 정부나 생산자가 어느 날 만들자 한다면 엄청난 자금과 인력이 소요될 것이고 결국은 그 동안의 물류시스템(재활용 가능품, 수집·판매업계)에 대한 보완으로 확립하는 방법이 제일 효율적이다.

물론 현재 재활용 가능 품 물류체계는 복잡 다양하고 겉으로 보기에 무질서하게 보여도 이러한 체계가 수 십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초석이 되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획일화된 물류체계는 아니지만 좀더 공을 들인다면 EPR제도의 조기 정착에 주춧돌이 되리라 생각된다. 물론 수집업계의 자구력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재생용재료 수집·운반업계 대처방안

2-1. 기존 재생용재료수집 운반업계의 관계

환경부에서 작년 한해 추진한 '리싸이클 2001' 운동에서 알 수 있듯이 민간수집상들은

재활용산업의 초석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이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재활용품 수거량 총 1,871,658톤 중 민간수집상들은 1,622,502톤을 수거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에 생산자들은 별도의 회수기구의 구성보다는 기존의 수집·운반 시스템(민간수집상)을 이용해 회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또한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회수역할을 전담시키기 위한 신규투자나 기구를 만들 것을 중용하기보다는 기존의 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품을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단체나 조합에 위탁할 수도 있도록 유도하여 기존의 수집상의 기능을 보다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문수집상 단체나 조합은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단지조성 등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2. EPR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과 주체문제

협의체는 생산자 단체, 민간수집상단체(조합), 정부, 순수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하여 그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광역의 협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3. 회수체제에 대한 민간수집상들이 차지하는 규모

(사)한국폐자원재활용수집협의회는 1993년 12월 폐자원재활용수집, 운반업 업체(취급품목: 폐지) 고철, 플라스틱류, 페트, 철캔, 유리 등 재활용가능품)들이 주축이 되어 환경부

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현재 전국 16개 시·도 지부와 220여 시·군·구 지회로 구성된 유일한 수집상 단체로서 전국 재활용품 수거량의 대부분(80%~90%)을 수집·운반 및 가공 처리토록 하여 자원재활용과 국가 자원확보 및 환경보존에 일조를 담당해 왔다.

2-4. 생산자와 민간수집상들의 관계 및 역할

생산자들은 새로운 회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보다는 그 동안 수집·운반에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한 민간수집상들의 시스템을 향상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협의회에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시 재활용품 수집, 운반 등 책임수거

체계제도 확립 준비를 위한 민간수집상 역할의 극대화를 위해 각 시·도별 재생용재료수집판매업협동조합(현재 14개 시·도조합설립인가)을 설립하고 전국연합회를 창립하여 공동판매, 공동구매, 공동집하장 조성 등 전국적인 수집·운반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을 통하여 민간수집상을 육성, 발전시켜 EPR제도 도입시 생산자단체(조합)에서의 수집·유통을 위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 없이도 한국폐자원수집협의회(조합)와의 계약에 의거 회수·처리가 가능토록 하여 상호간의 사업투자 중복을 방지하고 경제적인 효율과 기능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수집상단체의 자구적인 노력과 생산자단체의 민간수집상 단체에 대한 이해와 협조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 회원가입 안내

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물길이 나아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산업이 강건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포장업계의 발전이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본 협회에 가입하여 친목도모는 물론 애로사항을 협의하여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포장업계에서 성장하기 원하시면 (사)한국포장협회로 오십시오.

(사)한국포장협회

TEL 02)835-9041~5